

2012년07월01일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

【1과목 : 40문제】 민법(총칙,물권)	1	2	3	4	5	6	7	8	9	10
	③	③	②	④	③	⑤	④	②	③	④
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	③	①	②	①	④	①	④	③	③	②
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	②	③	⑤	②	⑤	④	⑤	①	②	⑤
	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	①	⑤	⑤	⑤	①	④	②	①	①	④

【2과목 : 40문제】 경제학원론	41	42	43	44	45	46	47	48	49	50
	④	①	③	④	④	②	①	②	③	②
	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	④	③	①	②	⑤	⑤	⑤	⑤	③	③
	61	62	63	64	65	66	67	68	69	70
	①	④	①	④	③	②	①	⑤	②	⑤
	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	⑤	④	③	②	④	②	③	⑤	①	③

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: <https://www.cbtestpro.kr>

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(오타 • 오답 • 규정변경)은 cbtestpro.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.

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. cbtestpro.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.



전자문제집 CBT

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!



【1과목】 민법(총칙,물권) (40문제)

1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③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,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.
-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.

2.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, 5월 25일
- ①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5월 17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, 1952년 7월 8일 오후 3시에 출
- ② 생한 직원은 2012년 7월 8일 오전 0시에 정년을 맞이한다.
- ③ 1981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01년 5월 21일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.
- ④ 기간의 말일이 2012년 3월 10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2012년 3월 12일 월요일로 만료된다.
- ⑤ 다가오는 2012년 7월 7일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, 2012년 7월 13일 24시에 만료된다.

3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,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
- ②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.
-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
- ③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.
- ④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, 증여계약은 무효이다.
-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
4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
- ②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-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.
- ④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,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 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.

5.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.

6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.
- ②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.
-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인
- ④ 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
7.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
① 효로 된 경우,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
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.

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,
② 점유자는 시효기간완성 후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
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, 자주점유 여부에 관
③ 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.

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
⑤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
산을 무단점유한 경우,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.

8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
①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
를 요한다.

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
② 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
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은 가진다.

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
③ 으면,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
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.

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
④ 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 없다.

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
⑤ 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
된다.

9. 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 용 · 수익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
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에서 丙 앞으로 직접 경료된 소
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.

甲과 丙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에
② 관한 3자 합의가 있다면,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
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
③ 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, 인상된 매매대금이
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
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

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중
④ 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
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.

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
⑤ 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.

10.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
① 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 甲이 토지의 소
유권을 취득하였다면,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
② 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에 甲이 그 저당
권을 취득한다면,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.

甲 소유의 건물에 乙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
③ 丙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, 후일 乙이 甲으
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丙 소유의 토지에 甲의 1순위저당권과 乙의 2순위 저당
④ 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, 甲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
을 취득하였고 甲의 피담보채권이 존속할 경우에는 乙의
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.

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
⑤ 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,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
당권은 부활한다.

11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
- ①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.
-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
- ② 없으나,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- ③
-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
-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
- ⑤ 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.

12.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
- 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-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
- ②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
- ③ 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,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-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
- ④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
- 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13. 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ㄱ. 丙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- ㄴ. 丙이 동의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.
- ㄷ. 丙의 동의는 甲의 법률행위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후에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.
- ㄹ.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극적인 사술을 쓴 것만으로도 취소권이 배제된다.
- ㅁ. X 토지가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, 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.

- ① ㄱ, ㄹ
- ② ㄱ, ㅁ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ㅁ

14.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?

- ① 소유권의 포기
- ② 해제
- ③ 동의
- ④ 추인
- ⑤ 채무면제

15.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.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.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?

- ① 甲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
- ②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
- ③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
- ④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
- ⑤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

16.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- ① 가장채권 양수인의 포괄승계인
-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
-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-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
-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

17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
- ①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, 본인이 그 기간 내에 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 - ②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.
 - ③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.
 -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.
 - 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18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,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
- ① 하면 족하고,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, 공
- ② 박 ·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 게 피
- ③ 해 당사자의 공박 · 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- ④
-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
- ⑤ 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공박 ·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.

19. 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.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.
- 甲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乙이 공포심을
- ② 느꼈다면 그것이 乙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乙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.
-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의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.
- ③
- 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
-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- ⑤

20.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.
-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.
- ③
- 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- ④
-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 추인이 된다.
- ⑤

21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
- ① 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.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
- ② 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
- ③ 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-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
 -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⑤

22.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.
-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.
-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.
-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.
-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.

23.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②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,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- ③ 丙은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24.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본인의 사망
- ② 본인의 파산
- ③ 복대리인의 금치산
- ④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
- ⑤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

25.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
- ② 甲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이 창고를 지어 부합된 경우
- ③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수인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
- ④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여 甲이 상속한 경우
- ⑤ 甲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·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

26.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.
- ② 양수인의 선의·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건행위가 완성된 때이다.
- ③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.

27.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다.
- ②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.
- ③ 등기명의를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- ④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변경된다.
- ⑤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
28. 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· 공연하게 1989. 2. 1.부터 2012. 7. 1.까지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2009. 3. 2.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년
- ① 이 경과하더라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.
2012. 7. 1. 甲이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, 乙은
- ② 등기 없이도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.
- 甲은 乙에게 1989. 2. 1.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의 임
- ③ 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.
2010. 3. 5. 甲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
- ④ 를 해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.
1995. 5. 15. 甲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,
- ⑤ 2012. 7. 1. 乙은 戊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29.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
- 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.
-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
- ②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
- ③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.
-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
- ④ 멸실,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,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을
- ⑤ 청구할 수 없다.

30.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법인의 목적
- ② 법인의 사무소
- ③ 자산의 총액
-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
- ⑤ 감사의 성명과 주소

31.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
- ①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.
-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
- ② 할하고,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공유물분할은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.
- 공유물의 분할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
- ④ 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.
-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, 분할부분의 경
- ⑤ 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32.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
- ① 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.
-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
- ②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.
-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
- ③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.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,
- ④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
-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
- ⑤ 인정된다.

33.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.
- ①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암장(暗葬)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
- ③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-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.
- ⑤

34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.
-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
- ②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.
-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
- ③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
- ④ 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
- ⑤ 분할된 경우,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.

35.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·반출된
- ① 경우,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,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
- ②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
- ③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
- ④ 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
- ⑤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·수익하는 경우,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36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
- ③ 가 절반하여 취득한다.
- ④ 설립등기된 법인은 총유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다.
-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
- ⑤ 이를 취득한다.

37.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
- ①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-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
- ② 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
- 채권자는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
- ③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.
-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
- ④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
- ⑤ 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.

38.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- ②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- ③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
-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등기청
- ④ 구권
- ⑤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

39.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
- ① 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.
-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
- ②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.
-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
- ③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,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.
-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.
- ④
-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
-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
- ⑤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.

40.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.
- ②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.
- ④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⑤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【2과목】 경제학원론 (40문제)

41.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$Q = 1000 - P$ 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.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Q는 수량, P는 가격이다.)

- ①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원이다.
- ②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이다.
- ③ 균형가격은 100원이다.
- ④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.
- ⑤ 소비자들은 가격순응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.

42.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,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,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.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생산이 3이고, 자본의 한계생산은 1일 때, 현재 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? (단,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,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.)

- ① 노동의 투입량은 늘리고, 자본의 투입량은 줄일 것이다.
- ② 노동의 투입량은 줄이고, 자본의 투입량은 늘릴 것이다.
- ③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늘릴 것이다.
- ④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.
- 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.

43.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가 된다.
- ② 완전경쟁시장과 가격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.
- ③ 가격차별은 경제적 순손실(deadweight loss)을 항상 증대시킨다.
- ④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.
- ⑤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일종이다.

44. 시장수요가 $Q = 100 - P$ 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$C = 20Q$ 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? (단, Q는 수량, P는 가격, C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.)

- ① 0.0
- ② 0.5
- ③ 1.0
- ④ 1.5
- ⑤ 2.0

45.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기평균고정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.
- ② 단기총평균비용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과 단기평균고정비용의 합이다.
- ③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단기한계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.
- ④ 노동의 한계생산이 불변이면 단기총평균비용 곡선은 수평이다.
- ⑤ 단기한계비용이 단기총평균비용보다 큰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증가한다.



전자문제집 CBT(App Store) : [\[다운로드\]](#)



전자문제집 CBT(Google Play) : [\[다운로드\]](#)

46. 기업 A의 비용함수는 $C = \sqrt{Q} + 50$ 이다.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, 이윤이 0이 되는 가격은? (단, C는 총비용, Q는 생산량이다.)

- ① 1
- ② 0.6
- ③ 0.5
- ④ 0.2
- ⑤ 0.1

47. 기업 A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수준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.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은? (단,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뿐이다.)

노동투입	자본투입	총생산
1	4	20
2	2	20
3	2	28
4	1	20
4	2	35
4	3	38
4	4	40

- ① 규모의 경제
- ② 규모수익 불변
- ③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
- ④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
- ⑤ 노동에 대한 자본의 한계대체율 체감

48. 기업 A의 생산함수는 $Q = LK$ 이다.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1원일 때,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Q는 생산량, L은 노동, K는 자본이다.)

- 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.
- ②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.
- ③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10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01원이다.
- ④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하락한다.
- ⑤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한계비용은 불변이다.

49.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여가는 정상재이다.)

- ① 시간당 임금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다.
- ②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,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.
- ③ 시간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,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.
- ④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,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.
- 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, 대체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항상 증가한다.

50.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(deadweight loss)은 같다.
- ② 조세부담의 귀착(tax incidence)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.
-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.
-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.
-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.

51. 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,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.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,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? (단, $X > 0, Y > 0$ 이다.)

- ① 150
- ② 200
- ③ 300
- ④ 450
- ⑤ 550

52. 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,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.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.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,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? (단,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.)

- ① 0이다.
- ② 1 이상 2 미만이다.
- ③ 2 이상 3 이하이다.
- ④ 3보다 크고 4 이하이다.
- ⑤ 4보다 크다.

53.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? (단, 선풍기는 열등재이다.)

- ① 대체재인 에어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.
- ② 대체재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.
- ③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.
- ④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었다.
- 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.

54.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,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,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. 甲은 위험기피자, 乙은 위험애호자,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의 도박에의 참여 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.
- ②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, 甲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.
- ③ 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.
- ④ 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.

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,000원 올려 10,000원으로 하고,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,000원 내려 9,000원으로 하면 甲, 乙, 丙 모두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.

55.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,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, 이들의 소득 분포는 (X, Y)의 형태로 표시한다.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.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A :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.
- B :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이 클수록 바람직하다.
- C :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바람직하다.

- ① 소득분포 (3, 2)와 (5, 1)을 비교할 때, 원칙 A에 따르면 (3, 2)가 더 바람직하다.
- ② 소득분포 (3, 2)와 (4, 2)를 비교할 때, 원칙 B에 따르면 (4, 2)가 더 바람직하다.
- ③ 소득분포 (1, 1)과 (4, 1)을 비교할 때, 원칙 C에 따르면 (1, 1)이 더 바람직하다.
- ④ 소득분포 (3, 3)과 (2, 3)을 비교할 때, 위 세 가지 원칙 모두 (3, 3)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.
- ⑤ 소득분포 (2, 3)과 (7, 3)을 비교할 때, 위 세 가지 원칙 중 (7, 3)이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 뿐이다.

56.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부(-)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.
- ㄴ.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.
- ㄷ. 코우즈(R. Coase)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ㄱ, ㄴ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
- ⑤ ㄱ, ㄴ, ㄷ

57. 한 시장에 두 기업 A, B가 존재한다.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,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. (단,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,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.)

		B	
		L	H
A	L	1, 1	0, 0
	H	0, 0	0, 0

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기업 A의 생산 전략 H는 우월전략이다.
- ㄴ.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L을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.
- ㄷ.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H를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.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ㄱ, ㄴ
- ⑤ ㄴ, ㄷ

58.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$U(x, y) = \min\{x, y\}$ 이다.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, x는 X재 소비량,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.)

-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.
-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다.
-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이다.
-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-1이다.
- 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.

59. 국내물가가 4%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%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%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? (단,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.)

- ① 4%
- ② 6%
- ③ 8%
- ④ 10%
- ⑤ 12%

60.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.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, 헥셔-올린(Heckscher-Ohlin)모형과 스톨퍼-새뮤얼슨(Stolper-Samuelson)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두 국가의 자본가격은 같아진다.
- ㄴ. B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.
- ㄷ. A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, B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.

- ① ㄱ
- ② ㄱ, ㄴ
- ③ ㄱ, ㄷ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
61.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국민소득이 소비, 투자, 정부지출의 합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(+)이 된다.
- ㄴ.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(+)이 된다.
- ㄷ. 정부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(+)이 된다.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ㄱ, ㄴ
- ⑤ ㄴ, ㄷ

62.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?

-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.
- ②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였다.
- ③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.
- ④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다.
- 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.

63. 총수요-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
- ②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
- ③ 신용카드사기 증가로 현금사용 증가
- ④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
- 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지역 수출 감소

64. 폐쇄경제 IS-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IS 곡선은 우하향, LM 곡선은 우상향한다.)

- ① IS 곡선과 LM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.
- ②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.

현재 경제상태가 IS 곡선의 왼쪽,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

- ③ 다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,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.

- ④ 피구효과(Pigou effect)에 의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.

- ⑤ IS-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은 내생변수이다.

65.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,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.
- ②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한다.
- ③ 물가가 상승한다.
- ④ 물가가 하락한다.
- ⑤ 명목 GDP는 불변이다.

66. 명목 GDP(국내총생산)와 명목 GNI(국민총소득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폐쇄경제에서 명목 GDP는 명목 GNI와 크기가 같다.
- ㄴ.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 명목 GDP가 명목 GNI보다 더 크다.
- ㄷ.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.
- ㄹ.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67.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(working age population)가 5천만 명, 실업자가 5백만 명,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.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?

- ① 50%, 40%
- ② 50%, 80%
- ③ 40%, 40%
- ④ 40%, 60%
- ⑤ 40%, 80%

68. 인플레이션 조세(inflation tax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로 정의된다.
- ②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.
- ③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정부가 정부채권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.
- 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.

69.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? (단, Y는 국민소득, C는 소비, I는 투자, G는 정부지출, r은 이자율, M^d 는 명목화폐수요, M^s 는 명목화폐공급, P는 물가수준이다.)

$$\begin{aligned}
 Y &= C + I + G \text{ (생산물시장의 균형)} \\
 Y &= 100 \\
 C &= 20 + 0.5Y \\
 I &= 30 - 50r \\
 G &= 10 \\
 M^s &= M^d \text{ (화폐시장의 균형)} \\
 \frac{M^d}{P} &= 0.01Y - r \\
 M^s &= 20
 \end{aligned}$$

- ① 15
- ② 25
- ③ 50
- ④ 75
- ⑤ 100

70. 실물경기변동이론(real business cycle theory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기술 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
- ②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.
- ③ 경기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.
- ④ 불경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다.
- ⑤ 생산성은 경기역행적(counter-cyclical)이다.

71.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$$\text{실질 GDP 변화율}(\%) = 3\% - 2 \times \text{실업률}(\%) \text{의 변화}$$

- ① 자연실업률은 3%이다.
- ② 실업률이 5%에서 6%로 상승하면 실질 GDP는 2% 감소한다.
- ③ 실질 GDP가 1% 하락하면 실업률은 5%에서 5.5%로 상승한다.
- ④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.
- ⑤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3% 증가한다.

72.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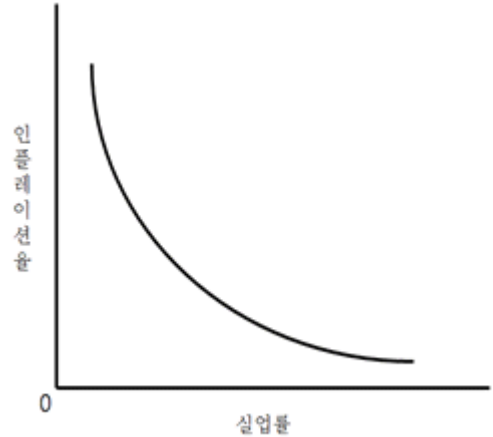
- ① 피셔(I. Fisher)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차입 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.
- ② 항상소득가설(permanent income hypothesis)은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.
- ③ 생애주기가설(life cycle hypothesis)은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한다.
- 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.
- 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일정하다.

73. 솔로우(R. Solow)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$y = k^{1/2}$, 저축률은 12%, 인구증가율은 1%,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%이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y는 일인당 생산량,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.)

- ㄱ. 균형상태(steady state)에서 일인당 산출량은 4이다.
- ㄴ.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같다.
- ㄷ. 균형상태에서 황금률(golden rule)이 달성되고 있다.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
74.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.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? (단,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, 가로축은 실업률이고, 단위는 %이다.)



- ①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.
- ② 소득세를 인한다.
- ③ 통화량을 감소시킨다.
- ④ 기준금리를 인상한다.
- ⑤ 법인세를 인상한다.

75.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. 현금보유자의 실질 수익률은?

- ① 실질 이자율
- ② 실질 이자율의 마이너스 값
- ③ 인플레이션율
- ④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값
- ⑤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

76.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.
- ②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셰 지수(Paasche Index) 산식을 사용한다.
- 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 포함된다.
- ④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.
- ⑤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5년마다 달라진다.

77.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(Taylor rule)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i 는 명목이자율, π 는 인플레이션율, π^* 는 목표 인플레이션율, Y^* 는 잠재 GDP, Y 는 실제 GDP, $(Y^* - Y)/Y^*$ 는 총생산갭이다.)

$$i = 0.05 + \pi + 0.5(\pi - \pi^*) - 0.5(Y^* - Y)/Y^*$$

- 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.
- 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.
- 총생산 갭은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%에서 4%로 상승
- ③ 하는 경우에,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.5% 포인트(%p) 인상한다.
- ④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 GDP와 같다면 실질이자율은 5%가 된다.
-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%에서 1%
- ⑤ 로 상승하는 경우에,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.5%포인트(%p) 인하한다.

78.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.
- ②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시중은행 A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.
-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승수는 감소한다.
- ④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.
- ⑤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.

79.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.
- ㄴ.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.
- ㄷ.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.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ㄱ, ㄴ
- ⑤ ㄴ, ㄷ

80.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%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.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%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
- ㄴ. 고정된 봉급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- ㄷ.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
- ㄹ.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차입자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
- ⑤ ㄴ, ㄹ